

“헌혈과 기부를 동시에”…‘헌혈기부권’ 호응 뜨겁다

헌혈 기념품 대신 기부금 기탁 장학금·취약계층 지원금 사용
작년 광주·전남 1억 넘게 적립
올해 6.5명당 1명 선택 증가세

헌혈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여름 막바지, 혈액 보유량을 늘리기 위한 여러 노력이 진행 중인 가운데 헌혈과 기부를 동시에 실천하는 ‘헌혈기부권’이 주목받고 있다.

‘헌혈기부권’은 헌혈자가 헌혈 후 기념품 대신 기부를 선택하면 전혈, 혈장, 혈소판 헌혈자는 5000원, 판혈장 헌혈자는 8500원이 기탁되는 제도다.

헌혈기부권으로 적립된 성금은 향후 장학금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되고 긴급지원·건강증진·생명보호 등 다양한 지원사업분야에 투입된다.

이를 통해 헌혈자는 피로 생명을 나누는 봉사와 함께 기부까지 하는 뿌듯함을 더할 수 있다.

더불어 연말정산의 혜택도 있다. 헌혈 기부권을 선택한 헌혈자의 정보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돼 소득공제 혜택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양자인 부모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지난해에는 전국에서 32만여명이 헌혈 후 기부권을 선택해 13억6000여만원의 성금이 모아졌다. 광주·전남에선 2만 3898명이 헌혈 기부권을 선택, 1억1040만원의 기탁금이 모아졌다.

올해는 7월 말 기준 광주·전남에서 헌혈자 11만1753명 중 1만7464명이 기부

권을 선택해 7104만2500원의 기부금이 적립돼 연말엔 작년 기부권 규모를 뛰어넘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헌혈자 6.5명당 1명이 기부권을 선택한 것으로 지난해 9명 당 1명과 비교해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헌혈기부권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29일 오후 광주 북구 광주병원 정문 앞 헌혈버스에서 헌혈에 참여한 광주병원 주임 김모(31)씨는 “지난 2017년부터 매년 한 번씩 헌혈을 해왔는데 오늘 기부권에 대해 처음 알았다”며 “그동안 무심코 기념품을 선택했는데 좋은 취지의 기부권에 대해 알게 돼 앞으로는 기부권을 선택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어 “헌혈자 기념품 안내문에 작게 기부권에 대한 설명 문구가 기재돼 있는데 좀 더 큰 안내문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며 “헌혈과 함께 기부까지 동시에 할 수 있는 기회라 홍보만 더 이뤄진다면 기부권을 선택하는 헌혈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병원 간호사로 근무 중인 장혜진(43)씨는 “20대 때부터 헌혈을 해왔다. 현재 1+1 프로모션이 진행 중이라 자녀를 위해 다이소와 올리브영 상품을 골랐다”며 “예전에 헌혈의 집을 찾았을 땐 상품을 고르기 전에 직원이 기부권에 관해 설명했지만, 현장에서 찾아가는 헌혈 행사를 진행할 땐 이런 홍보나 안내가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광주·전남혈액원은 헌혈기부권 선택 비율을 늘려 자발적 헌혈문화를 만드는 것

은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광주·전남혈액원 관계자는 “헌혈기부권은 강요가 아닌 선택이다”며 “건강한 헌혈문화 조성을 위해 대가 없는 무상헌혈을 늘려 본연의 취지를 살리는 건 궁극적으로 나아갈 길이지만, 제공하는 상품에 대한 의존도가 큰 상황에서 기념품 없이 자율적 헌혈에만 의존할 경우 헌혈자 수가 급격히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이런 자발적 헌혈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선 정부·차원의 제도 마련과 헌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제고가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동수 광주·전남혈액원장은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헌혈기부권에 대

한 안내와 기부금 사용처를 알리고 있다. 혈액원에서도 신문·방송 등 매스컴과 SNS를 통해 꾸준히 홍보를 하고 있다”면서 “헌혈 인식 개선을 위해 학교와 기업, 단체 등에서 헌혈교육이 필수로 이뤄져 국민들에게 헌혈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필요성을 전달하고 자발적인 헌혈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이어 “혈액이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을 미리 알 수 없고, 혈소판의 경우엔 보유기간이 5일 이내로 매우 짧다”며 “우리 지역의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해 시·도민의 지속적인 헌혈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에

따르면 29일 기준 혈액 보유량은 5.9일본(△O형 4.2일본 △A형 6.0일본 △B형 7.9일본 △AB형 5.5일본)이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적정 보유량 기준인 5일을 넘겼지만, 7월 평균 7일본 후반대, 8월 중순까지 6일본 중반대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혈액 보유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특히 O형은 기준치를 밑돌아 시민들의 헌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광주·전남혈액원은 혈액 수급의 어려움을 예상하고 지난 13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이어지는 ‘31일간 사랑의 헌혈’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헌혈행사에는 28일까지 4900여명이 참여해 여름철 혈액 부족 사태 타개를 위해 나섰다.

박찬 기자



5·18정신 배우는 대만 고교생들

대만 타이난시 고교생들이 29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헌화·

참배 후 묘역을 둘러보고 있다. 고교생들은 31일까지 전일빌딩 245 등 5·18

사적지를 탐방하며 오월 정신을 배운다.

나건호 기자

조선대병원 노조 무기한 총파업 돌입

“의정갈등 장기화 업무 과중”
업무환경 개선·임금인상 요구

조선대학교병원 노조가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인한 과중한 업무 등을 이유로 총파업에 나섰다.

보건의료노조 조선대병원지부는 29일 오전 8시30분 병원 로비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이날 출정식에는 전체 조합원 1200여명 가운데 필수 유지 부서 인원 등을 제외한 400여명이 참가했다.

노조원들은 이날 총파업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 노동자들은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려고 이 자리에 나왔다.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이 개선돼야 안전에 신경 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 공백을 메꾸고 희생과 고생을 분담한 것은 남아있는 보건의료 병원 노동자들이다”며 “우리는 충분히 모든 것을 내려놓았지만 병원은 끝까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금 의정갈등 상황 속에서 조선대병원만 힘든 것이 아닌 타 사립대 병

원들도 힘들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에서 3% 이상씩 임금이 인상됐는데 조선대병원은 직원에 대한 보상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선대병원지부는 병원측에 임금인상과 함께 단체협약 조건으로 간호사 파견근무 금지, 토요일 외래 진료 금지, 야간근무 개선, 자녀돌봄휴가 확대,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범위 명시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전공의 공백에 따른 업무과중을 호소하며 2.5% 임금인상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경영난 등을 이유로 오는 9월부터 2.5%의 임금 인상안에 대한 소급 적용을 제언했다.

조선대병원지부는 파업에 앞서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정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투표에는 조합원 1177명 중 1078명이 참여했고 이 가운데 74.7%인 805명이 정의행위에 찬성했다. 조선대병원지부는 간호사 70%, 방사선사 등 보건직 15%, 행정직 10% 미만 등으로 구성됐다.

김은지 기자

“경찰 승진 제도 공정성 훼손”… 승진 뇌물 받은 치안감 법정구속

1000만원 받아…징역 1년6개월
법원 “매관매직 행태 근절돼야”

승진 청탁 등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 받은 현직 치안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사건에 연루된 브로커, 현직 경찰관들 역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29일 각기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59) 치안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000만원·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브로커를 통해 청탁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7) 경감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실형 선고에 따라 김 치안감과 박 경감은 법정구속됐다.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성모(62)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22년 2월 브로커 성씨에게 두차례에 걸쳐 광주청 소속 당시 경위였던 박 경감의 승진 인사에 대한 대가성 금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경감은 앞서 같은 해 1월 브로커 성씨에게 자신의 승진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성씨는 ‘승진 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박 경감에게 받은 현금을 김 치안감에게 건넨 혐의다.

현직인 김 치안감과 박 경감은 모두 검찰 수사 개시 직후 직위 해제된 상태다.

재판 과정에서 김 치안감과 박 경감은 성씨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소사실을 대체로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성씨는 수사·재판에서 박 경감으로부터 받은 돈을 김 치안감에게 건넸다는 핵심 진술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했다. 일부 번복하거나 돈을 건넨 시점이 바뀐 사정은 검찰이 제시한 객관적 증거를 본 성씨가 과거 기억을 되살려낸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성씨가 허위 진술로 그동안 형·동생 사이로 지내왔던 김 치안감을 무고하거나 치명적 비위 누명까지 씌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성씨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했다.

또 “이들의 범행으로 경찰 조직의 명예가 실추됐고 경찰 승진 인사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무궁화 1개당 1000만원이라는 속설이 난무하는 매관매직 행태는 근절돼야 마땅하다”고 법정구속을 결정했다.

이날 별도로 진행된 퇴직 경감 출신 ‘문고리 브로커’와 함께 연루된 현직 경찰관들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모두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 부장판사)는 29일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실형을 받은 양모(57) 경정의 항소심에서 양 경정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 경정과 함께 각자의 승진을 금품 청탁한 혐의로 기소돼 각기 징역 6~8개월의 집행유예 1~2년을 선고받은 강모(56) 경감·임모(51) 경감·이모(56) 경감의 항소와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도 모두 기각했다.

양 경정 등 현직 경찰관 4명은 2021년 초 브로커 성씨 또는 인사권자와 친분이 있는 전직 경감급 브로커 이씨에게 인사 청탁 대가성 금품 1500만~3000만원을 각기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김은지 기자

광주 학교서 ‘딤편이크 성범죄’ 4건 확인

광주지역 중·고등학교에서 여성 얼굴에 음란물 사진을 합성해 유포하는 ‘딤편이크’ 성범죄가 4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광주시교육청은 관내 학교 2곳에서 딤편이크 성범죄 피해 신고가 접수돼 사실 관계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A중학교에서 남학생 1명이

긴급 분리조치·피해자 심리상담

딤편이크 피해를 호소했다.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는 해당 학교 가해 남학생 1명에 접근금지 조치를 내렸다. B고등학교에서도 딤편이크 피해를 입은 여학생 4명과 가해 남학생 1명이 긴급 분리 조치됐

다.

앞서 지난 4월에도 관내 중학교 2곳에서 딤편이크 피해 신고가 접수돼 피해자 심리상담 등을 지원했다.

C중학교에서는 여학생 6명이 딤편이크 피해를 봤으며, 남학생 1명이 가해자로 확인됐다. 또 다른 D중학교에서는 피해·

가해 여학생 각 1명이 확인됨에 따라 심리상담, 가해자 학급 교체 등이 이뤄졌다.

시교육청은 이날 딤편이크 대응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사이버성범죄 재발방지 특별교육 강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강주비 기자